

국가폭력에 대한 기억투쟁: 5·18과 4·3 비교연구

이성우*

목 차

- | | |
|--------------------------|--------------------------------------|
| I. 서론 | IV.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으로 자리잡은 광주
5·18 항쟁 |
| II. 기억 투쟁 | V. 결 론 |
| III. 강요된 침묵 속의 제주 4·3 항쟁 | |

요 약

본 논문의 목적은 5·18과 4·3의 역사적 함의의 차이가 생겨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두 항쟁의 다른 역사적 함의는 두 항쟁이 일어난 이후 진행된 기억투쟁의 다른 양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5·18과 4·3은 한국의 근현대사와 한국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서,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일정부분에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일어난 양민학살 사건과 그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은 항상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가지게 되고, 사건이후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면 왜 두 항쟁에 대한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적 함의는 차이가 가지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제주 4·3 항쟁은 1948년 항쟁의 발생이후 국가의 억압에 의해 오랜시간 동안 침묵을 강요당하며 지속적인 기억투쟁을 전개하지 못하였고, 광주 5·18 항쟁은 1980년 발생 이후 국가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투쟁을 전개하여, 새로운 정치적 함의가 생산되었다. 결과적으로 광주와 제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평가의 차이는 국가폭력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만드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의한 강한 기억투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주제어: 국가폭력, 기억투쟁, 기억의 정치, 5·18, 4·3

** 고려대학교/정치학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5·18과 4·3의 역사적 함의의 차이가 생겨난 기원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두 항쟁의 다른 역사적 함의는 두 항쟁이 일어난 이후 진행된 기억투쟁의 다른 양상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민중들은 억압적인 국가권력에 대항하여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기를 원하는 힘겨운 싸움을 벌였다. 때문에 한국 현대사는 민주화 투쟁의 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으로 희생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을 기록하고 있다.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은 개인적인 생활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침묵, 방관, 왜곡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해방 이후 한국에서 자행된 양민학살의 주체는 국가권력이었다. 해방 이후 독립국가수립을 꿈꾸던 민중들에게 분단은 또 다른 상처였으며, 이를 추진하는 국가세력들을 적대시 하였다. 이에 국가수립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반공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국가를 수립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쟁취하고 유지시켜나갔다. 때문에 해방 이후 한국에서 자행된 대부분의 양민학살은 국가기구가 직접 개입한 국가 테러리즘이었다.

국가에 의해 자행된 양민학살은 국가권력이 폭력을 동원하여 대중들을 권력의 목표에 순응하도록 통제하는 과정이었다. 곧 국가권력의 이해와 어긋나는 대중은 국가의 이름으로 제거된다는 교훈을 주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중들의 국가권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게 하는 동시에 한편으로 대중이 국가권력에 순응하는 문화를 만들어낸다. 해방 이후 벌어진 여러 사건들 중에 광주와 제주에서 벌어진 4·3과 5·18은 대규모의 양민학살을 동반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권력을 확립하는데 이용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4·3사건은 해방 직후 불안정한 정치적 지형, 즉 남북분단과 좌우 이데올로기 대립의 국면에서 발발하였다. 5·18은 군사정권의 장기독재와 억압체제에 대한 민중적 저항투쟁이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주민의 공동체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졌고, 무장투쟁이라는 치열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해진 두 사건에 대한 역사적 사회과학적 연구는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건의 배경과 전개과정,

주요참여 세력들의 구성과 이념적 지향, 피해에 관한 사실적 연구와 함께 두 사건의 전체상과 역사적 의의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었다(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민주화 이후 재평가된 두 사건은 진상규명 작업이 이루어지고, 국가의 법률로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국 사회 전반에서 두 사건에 대한 평가에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5·18은 민중항쟁으로서 전체적으로 합의되는 정치적 역사적 의미가 부여되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서의 평가가 완료되었으나, 4·3은 국가폭력에 의해 양민이 학살되고, 인권이 유린된 사건으로 인식이 더욱 강해졌으나, 아직 그 역사적 평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5·18은 사건 자체로서의 상징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이끌어내는 힘으로 작동하였다. 민주화를 이끌어내는데 하나의 상징으로서 작용함과 동시에 독재자를 처벌하는 매개로 작동하여 90년대 중반 두 전직 대통령을 처벌하는 기제로 작동하였다. 그러나 4·3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5·18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고, 1993년에 와서야 공식화되었고, 그 보상에 대한 법률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루어졌다. 이는 4·3이 양민학살에 대한 기억은 인정이 되지만, 아직까지 공산폭동이라는 굴레를 벗어내지 못하고 있다. 5·18은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하지만, 4·3은 이제 '공산폭동'이라는 명칭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지만, 그 평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완전하지 못하다.

본 논문은 두 사건의 현재적 평가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하여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의 개념에 입각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이후 그 사건에 대한 '기억투쟁'(The Struggle of Memory)을 어떻게 벌이느냐에 따라 그 사건에 대한 현재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II. 기억 투쟁

기억이란 자신이 경험했던 것, 들었던 것, 그리고 아마도 스스로 만들었던 이미지 등을 끄집어내는 것이다(Hirsch 1995, 13-15). 그래서 기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처럼 생각된다. 기억은 한 개인의 두뇌 속에 있는 기억체계에 의하여 형성되고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인적이고 주관적으로 보이는 기억은 사회에서 공유되는 언어로 구조화되고, 시공간 개념에 의해 형성되고, 문화적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즉 한 개인이 속한 사회나 문화에 의해 특정과거가 강조되거나 변형되거나 망각된다. 때문에 기억은 사회적이다. 기억의 사회성을 강조하며 집합기억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는 알박스(Hallbwachs 1925)이다. 그는 기억을 자전적 기억, 역사적 기억, 집합기억으로 나누어 개인적 경험이나 역사적 기록과 다른 집합기억을 소개했다. 알박스의 집합기억이론은 1980년대에 재발견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집합기억 외에도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 문화적 기억, 대중기억 등 유사한 용어가 사용되었다. 학자에 따라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기도 하지만 공통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적 성격을 지닌 기억은 과거에 대한 사실을 현재적 필요성에 따라 끄집어낼 수 있다. 기억이란 과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기 보다 오히려 현재와 관련 속에서 과거를 재구성한 것이다(Popular Memory Group 1977). 기억은 과거를 표상하는 한 양식이며, 과거의 일을 재현하는 능력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회상과정에 기초하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과거 표상에 수정이 가해지기도 한다. 따라서 기억은 끊임없이 변하고 유동적이게 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과거에 대한 이미지를 선택적으로 연결되고 구조화되면서 특정한 과거상이 구성된다. 결국 기억의 과정에서 과거의 무엇이, 그리고 어떻게 재현되느냐는 기억주체의 현재적 관심, 또는 기억행위의 현재적 맥락이 개입된다. 따라서 기억은 자연적이기도, 중립적이기도, 순수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인공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기억이든 집합기억이든 그것이 존재하는 시공간에 따라 광범위한 변이를 보이게 되고, 단일 사건에 대해서도 복수의 집합기억이 성립한다. 그래서 집합기

억은 산만하고 모호하며 절충적인 개념/현상으로 간주되기도 한다(Halbwachs 1950).

사람들은 혼자서든 함께든 회상하고, 상기하며, 기념한다. 그렇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억의 실천 활동들은 학자들이 집단기억으로 취급하는 실제의 본질보다는 실제의 외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뿐이다. 행위자들은 기억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그들이 집단기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단기억의 일부로서 소요하고 싶어 하는 것에 관해 언급한다. 중요한 역사적 '사건'은 기억의 유한성 속에서 지워지거나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시대의 과제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기억에 관한 연구문헌에서 나타나는 한가지 경향은 지배를 둘러싼 경쟁과 투쟁을 기억의 목적으로 추적해왔다는 점이다. 그것은 곧 기억을 도구주의적(instrumentalist)인 견지에서 본다는 것을 뜻한다(Olick·Robbins 1998). 기억의 정치는 누가 어떤 것을 기억(또는 망각)할 것인가를 누가 왜 원하고 있기에 무엇이 기억(또는 망각)되느냐로 귀착된다. 이러한 기억의 정치는 계급·성·지역갈등 및 권력투쟁 등과 맞물려 격렬한 기억투쟁의 차원을 결부시키기도 한다. 역사적 기억의 구조화에 의해 한 사회, 한민족 성원들의 집단적 정체성 및 자긍심의 형성과 공동과업의 설정에 일정한 방향을 제시하고 틀을 잡아주기도 한다. 그래서 기억의 정치는 격동, 혼란, 분열을 겪고 있거나 겪었던 사회에서 집합체별 재통합의 구심점 형성을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의 면모도 띠면서 사회 및 정치과정의 중심부에 자리잡게 된다(나간채 외 2004, 15-16).

현재적 관심에 따른 '과거의 재구성'이 집합기억(collective memory)으로 남는다. 이러한 집합기억에 기반한 기억의 정치(Politics of Memory)가 작동하는 다양한 존재형태들 가운데 개인 혹은 집단들 간의 갈등 혹은 대립행위를 '기억투쟁'(the Struggle for the Memory)으로 정의할 수 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과 경험을 회상하는 것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억들을 가진 주체들이나 집단들의 끊임없는 기억투쟁을 통해 선별된 것이다. 기억투쟁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억의 정치란 집합기억의 역사화나 무화과정에 개입하는 사회-문화적 및 정치적 힘들의 역학관계와 그것을 둘러싼 담론적 실천의 기제를 일괄하는 개념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Hirsh 1995, 3, 9-10). 그것의 효과는 집합기억의

선별, 배제, 억압, 왜곡, 인멸만이 아니라 특정기억, 특정 요소의 부각, 환기, 부양, 재상으로도 나타나는 점에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띤다. 어떤 것을 기억하고 누가 어떻게 기억하는가가 중요한 기억의 정치는 종종 계급, 성, 지역갈등 및 권력투쟁 등과 맞물려 격렬한 '기억투쟁'의 차원으로 귀결된다.

전형적인 기억투쟁은 사회기억(social memory)와 공식기억(official memory) 사이에서 벌어진다. 국가와 지배엘리트들은 매스미디어 등을 동원하여 대중들의 기억을 동질화하고자하는 경향을 보인다. 공식기억만이 대중들의 뇌리에 기억되고 나머지 사회기억은 대중의 뇌리에서 사라지고 사회적 망각(social amnesia)로 빠져들도록 유도한다. 국가의 폭력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들은 국가권력의 형성·유지·강화를 둘러싼 갈등의 산물이자, 세력 간의 혹은 계급간의 다툼의 산물이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국가권력의 억압과 그에 대한 저항을 응축하고 있어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힘든 작업이다. 승리한 세력은 자신의 범죄적 행위요소들을 소멸시키거나,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 마련이다. 국가는 자신들의 폭력행사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공식기억(official memory)을 정의하고 확산시킨다. 그리고 공식기억에 대응하는 대응기억, 사회적 기억(social memory)을 억압하고, 대중들과 분리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공식기억과 사회적 기억의 대립이라는 구도 하에서 벌어지는 기억투쟁의 개념을 통해 5·18과 4·3의 역사적 평가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한다. 광주는 민주화과정 속에서 기억투쟁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민중항쟁으로 단일한 역사적 평가로 귀결시켰다.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서 80년대 한국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으로서의 역사적 의미 또한 부여받았다. 제주는 주체의 침묵과 민주화 이후 민주화로 열린 공간 속에서 진상규명 목소리가 나오고, 기억투쟁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의 기억은 제각기 다르고 그에 따라 그 역사적 평가에서도 민중항쟁론과 양민학살론으로 갈리고 있다. 그러면서 현재는 양민학살론이라는 역사적 평가가 더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평가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를 기억투쟁의 차이에서 찾고자 한다. 기억투쟁을 통해 관제 공식기억에 저항하여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나가는 과정으로서

기억투쟁을 전개해나감으로써 사건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재생산해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투쟁의 양태를 살피는 지표로서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검토해볼 것이다. 정기적인 추모식의 진행여부, 관련 집회와 시위의 유무, 집단적 정치적 의사표현 여부, 직접관계자 이외의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정도, 민주화 과정에서의 이슈화 정도를 보고 광주와 제주의 기억투쟁의 차이를 살펴볼 것이다.

Ⅲ. 강요된 침묵 속의 제주 4·3항쟁

1948년 4월 3일 새벽1시를 전후하여 한라산 오름마다 봉화가 타오르면서 무장봉기가 시작되었다. 이날 새벽 도내 24개 지서 가운데 11개 지서가 공격을 받았고, 경찰과 우익단체 간부의 집이 습격당했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4, 23). 남조선 노동당의 무장봉기와 더불어 제주도민들은 대체로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저항적이었다. 그 중요한 요인으로는 해방이 해방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단독선거와 단독정부수립으로 분단의 길로 가고, 이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였다. 이에 직접적으로 육지에서 제주도로 와 있던 서북청년단의 만행과 불법행위에 대한 불만이 제주도민들의 감정을 격분시켰고, 서북청년단과 경찰이 합세함으로써 감정의 대립은 점점 격화되어 급기야 4·3은 제주도민 전체의 봉기로 발전해갔다. 이러한 이유로 4·3은 국가테러 대 민중저항의 모습을 띠게 되었다. 국가의 민중에 대한 테러는 끔찍하였다. 주한미군사령부 1949년 4월 1일자 G-2(정보)보고서에 의하면 1948년 4월 3일 이후 1949년 6월까지 제주도에서는 1만5천명이 살해당했고, 가옥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제민일보4·3취재반 1994, 378).

제주도 4·3항쟁은 조국통일과 완전독립을 위하여 단독정부수립을 위한 선거를 거부하고 미군정에 저항하는 제주민중의 무장투쟁으로 시작되었으나, 1948년 남한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군대와 경찰력의 반공주의에 입각한 초토화작전으로 양민이 대량으로 학살당한 사건이다. 이는 국가폭력의 산물이며, 지난 50년간

반공이데올로기로 국가폭력은 정당화되어왔다. 광주와 달리 제주의 항쟁은 지금까지 그 평가에 있어서 침묵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그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에 있어서 광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4·3은 공식적으로 ‘공산폭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반공주의의 확립의 출발점이다. 제주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반공을 국시로 하는 대한민국 정부는 성립되었다. 반공질서를 구축하고 정립하는데 있어서 제주도는 희생양이 되었다. 반공을 내세운 국가폭력의 희생물로서 전국적인 반공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되었다.

한국의 공식역사에서 제주 4·3은 1948년 4월 3일 미명에 제주도 전역에서 좌익 무장대 조직이 경찰관서와 우익인사들을 습격한 사건으로 기술되었고, 결국 패퇴하고만 무장봉기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수십만 제주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4·3은 가족, 친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때죽음과 행방불명, 결코 되새기고 싶지 않은 온갖 고통과 오욕의 체험, 사건 종결 후에도 항상 따라다니는 정치적 핍박과 소외, 그로부터 입게 된 크나큰 심리적 상처들 ... 4·3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기억은 대체로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왔다. 이에 대해 국가는 4·3의 성격을 일찌감치 ‘공산폭동’으로 규정지어 주민학살행위에 대한 합리화를 기도하고 면죄부 부여의 근거로도 삼았다. 반공국가의 시선으로는 4·3당시의 제주도 주민들 상당수가 ‘빨갱이’ 또는 ‘폭도’였다.

〈표 1〉 제주도민의 4·3인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질문	응답지	응답빈도 (%)
4·3사건을 알고 있는가?	잘 알고 있다.	73
	들어서 알고있다.	26
	모른다	1
4·3사건을 어떻게 해서 알게 되었는가?	직접 체험했다.	71
	경험한 사람들의 얘기를 통해 알았다.	27
	책이나 신문을 통해 알았다.	1
4·3사건을 직접 체험했는가?	직접 체험했다.	71
	체험하지 못했다.	24
당시 4·3사건은 왜 일어났다고 보는가?	남로당 조직이 공산화를 일으킨 폭동	23
	좌우익 사상 싸움에서 비롯	17
	남로당 선동에 의한 반발	11

	경찰·서청 등의 횡포와 탄압에 의한 반발	8
	자주정신 및 5·10 선거 반대	5
	모르겠다.	27
	무응답	9
4·3사건 당시 양민학살 장면을 직접 본일이 있는가?	직접봤다.	53
	들어서 알고 있다.	43
	모르겠다.	3
4·3사건 당시 양민학살을 누가 더 했다고 생각하는가?	경찰·군인·'폭도'들이 했다.	41
	경찰이나 군인들이 했다.	32
	폭도들이 했다.	5
4·3사건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직접 피해를 보고 있다.	45
	직접적인 피해는 없지만 친지나 친구들의 피해를 보아왔다.	18
	피해가 없다.	36
4·3사건의 피해자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제주도민	74
	희생자 및 부상자와 그들 가족	14
	국민모두	5
	군인 및 경찰	1
	모르겠다.	3
	무응답	3

* 출처: 제주도문체연구소, 1989.

유족이나 후손들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라는 듯, 촘촘한 연좌제의 그물망이 계속해서 그들을 옥죄었다. 그래서 제주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더욱 위축되고 고립감에 휩싸일 수 밖에 없었다(나간채 외 2004, 26-27).

4·3은 지금까지 연구결과 세 가지의 역사적 평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4·3은 8·15 해방의 환희에 접맥되어 생겨난 독립자치적 정치공동체 건설의 열망이 미군정의 실시로 좌절되고 그 시도가 탄압받기까지 하여 나타난 주민저항 운동의 연장선상에서 발발한 것인데, 이는 민중항쟁적 측면을 중시한 입장이다. 둘째, 남북분단의 고착화를 예고하는 남한 단독선거 및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다는 명분과 함께 통일정부 수립의 기치를 내걸고서 남로당 제주도당내 급진파가 주장·주동하여 일으킨 무장봉기가 4·3의 한 외연을 이루는데, 이는 4·3을 반체 자주화의 민족통일운동으로 해석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셋째, 이러한 일련의 주민동향을 단속하고 무장봉기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미군정 당국의

독인·방조 하에 한국 군·경이 자행한 민간인 학살의 참극과 생활근거지 초토화, 다시 말해 국가폭력의 적나라한 시현과 그 후유증이 4·3의 빠뜨릴 수 없는 주요 평가를 이루었다. 결과적으로 4·3은 분단체제 하에 반공국가가 자기 탄생을 미화하고 자기 보위의 요구를 강력히 발하면서 민중저항에 대한 탄압과 반인권적 폭력을 정당화한 최초의 역사적 선례로 남게 되었다. 어떤 이유로든 토벌대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모조리 ‘빨갱이’로 치부되어버린 것은 그 때문이었다. 수많은 주민들의 무고한 희생과 피해는 아예 외면되거나, 희생자·피해자 자신 또는 좌익세력에게 전적으로 그 책임이 전가되었다. 그것은 4·3 무장봉기를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획책한 남로당 중앙당의 전략, 북한당국의 사주, 소련의 지령에 의한 것이라는 근거 박약한 해석을 가하는 데서 나아가 극력 부각시키려고 까지 했던 국가의 정치적 의도와도 밀접히 연결된다(나간채 외 2004, 29).

국가는 제주를 일방적으로 반국가적 ‘공산폭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지어 버렸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의 권위가 뒷받침하는 확고한 공식규정으로 1980년 대까지 거의 40년 동안 반공주의 지배담론의 중요자원을 이루어왔다. 그와 더불어 4·3의 역사적 기억도 국가의 전일적 주조와 독점관리체제하의 관제기억 (official memory)이 우선권을 누리면서 제주도민만 아니라 국민 일반에 공공기억(public memory)으로 주입·강요되는 방식으로 존재하였다(김영범 1999). 그것은 주로 관찬서를 통해 주조되고 교과서, 반공영화, 언론매체의 기획물 등을 통해 보강·전파되었으며, 그것에 대한 의심과 도전은 가혹한 법적 규제와 물리적 탄압의 대상이 된다는 두려움에 의해 일종의 성역처럼 유지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삶의 조건 속에서 제주사람들의 의식과 심리는 극심한 패배주의, 공포심(레드 콤플렉스), 자책감, 체념적 숙명론, 허무주의 사고에 점령당했다(김종민 1999). 때문에 4·3에 대한 제주도민의 기억은 가능한 한 되살리고 싶지 않고 떨쳐버리고픈 기억이 되었다. 그래서 대개 억압되고, 파편화된 상태의 것으로 수면아래 깊이 가라앉았다. 어쩌다 끄집어내더라도 관제기억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매우 분열된 모습으로 재현되었다.

〈표 2〉 역대 대선 후보자별 득표율(%)

1대	이승만 당선					48.7.24.국회간접선거
2대 (52.8.5)		이승만	조봉암	이시영	신흥우	직접선거
	전국	74.6	11.4	10.9	3.1	
	제주	83.8	6.4	7.0	2.8	
3대 (56.5.15)		이승만	조봉암			직접선거
	전국	70.0	30.0			
	제주	87.9	12.1			
4대 (60.10.15)		이승만				조병옥 급서로 이승만 단독후보로 직선
	전국	100				
	제주	100				
5대 (63.10.15)		박정희	윤보선	오재영	변영태	직접선거
	전국	46.6	45.1	4.1	2.2	
	제주	69.9	22.3	3.3	1.9	
6대 (67.5.3)		박정희	윤보선	오재영	김준연	직접선거
	전국	51.5	40.9	2.4	2.2	
	제주	56.5	32.1	3.4	2.5	
7대 (71.4.27)		박정희	김대중	진복기	박기출	직접선거
	전국	53.2	45.3	1.0	0.4	
	제주	56.9	41.4	1.3	0.3	
8대	박정희 당선					72.12.23. 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
9대	박정희 당선					78.7.6. 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
10대	최규하 당선					79.12.6. 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
11대	전두환 당선					80.8.27. 통일주체국민회의간선
12대	전두환 당선					81.2.25. 선거인단 간선
13대 (87.12.16)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직접선거
	전국	36.6	28.0	27.1	8.1	
	제주	49.8	26.8	18.6	4.5	
14대 (92.12.18)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박찬종	직접선거
	전국	42.0	33.8	16.3	6.4	
	제주	40.0	32.9	16.1	8.8	
15대 (97.12.18)		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권영길	직접선거
	전국	40.3	38.7	19.2	1.2	
	제주	40.6	36.6	20.5	1.4	

* 출처: 김종민. 1999, 398.

어떠한 정기적인 추모식도 치루지 못했었고, 관련 요구를 담은 집회와 시위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그런 양상은 1980년대까지 거의 변함없이 지속되었다. 4·3에 관해 비로소 제주도 주민, 특히 피해주민들의 입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던 1989년 1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45세 이상(1945년 이전 출생)의 도민 1,200명

을 대상으로 실시된 한 설문조사의 결과도 그러한 점을 잘 보여준다. 1990년 제주도 4·3 연구회가 유족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563명 응답)에서 4·3이 일어난 원인을 묻는 질문에서 '건국 전야 혼란기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답에 41.1%가 응답했고, '법질서가 확립되었다면 희생이 없었다.'에 38%가 응답하였다. 대부분의 유족들이 시국상황에 의해 어쩔 수없이 일어났다고 대답하였으며, 직접적인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월간관광제주 1990년 4월호). 이처럼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4·3의 기억은 거의가 부정적인 내용으로 채워진 채 기억 주체들의 의식의 분열까지 수반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가 만들어내고 전파한 관계기억에 대중적 기억이 포박된 결과였다고 볼 수 있으며, 국가가 벌여온 '기억의 정치' 또는 '기억투쟁'이 그만큼 성공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역대 대선에서의 제주도의 기본적인 투표 패턴은 보수적이며 반공체제 하에서 유력한 후보에게 투표하는 성향이 지속되어왔고, 특정 선거들에서는 전국적인 득표율보다 더 많은 득표율을 제주도에서 거두기도 한다. 광주지역은 지속적으로 김대중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온 것과 달리 제주도는 보수적인 여당후보들이 1위 득표를 해왔다. 이러한 투표행태가 바뀐 것은 민주화 이후 김대중 후보가 최고득표를 기록한 15대 대통령선거에 와서야 변하였다. 이러한 결과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끼쳤겠지만, 최소한 민주화 이전에 제주도에서 4·3에 대한 기억에 기반한 정치적 요구가 하나로 결집된 적은 없었다는 명확하게 드러난다. 단일한 정치적 목소리로 기억투쟁이 벌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제주도에서의 4·3에 대한 기억투쟁이 벌어지지 않는 속에서 대부분 육지에 있었던 일반국민들에게 4·3은 잊혀진 사건이었다. 그리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속에서도 4·3은 이슈화되지 못하였고,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이 맺어진 이후부터 4·3에 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2년 제주도 도의회에서 4·3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4·3피해조사를 시작하였다. 민주화 이전 제주는 4·3과 관련하여 지난 시기 동안 정부의 공식입장과 해석만을 받아들여야 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진상규명과 재평가작업이 진행되어 왔지만, 지난 정부의 공식기억을 완전히 뒤엎지 못하고 있다.

4·3에 대한 첫번째 진상규명 목소리는 1960년 4월 혁명 직후에 제주사회에서 처음 나왔다. 이때의 '진상'은 주민학살의 전모와 그 희생자 및 가해(책임)자에 관한 것이었다. 대학생 조직인 '4·3사건 진상규명 동지회'의 결성 및 조사활동, 대정읍민들의 진상조사 축구 쫓기대회, 제주신보사의 피해상실 신고접수 창구 개설, 재경제주학우회원들의 국회의사당 앞 시위 및 자체 조사작업 시도 등의 움직임들이 이어졌고, 1961년 봄에 남제주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숙은 「제주도 양민학살보고서」를 내고 위령탑 건립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5·16 군사쿠데타로 진상규명 노력은 좌절되고 말았다. 그 운동의 주역이었던 학생들과 언론인이 검거되고 모슬포 백조일손묘지와 위령비가 파훼되는 등의 대탄압이 가해지면서 진상규명운동의 기세는 급격히 꺾여 버렸다. 그 후 20여년 동안 4·3은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입에 올리지 못하는 금기가 되었다. 본격적인 진상규명 운동은 민주화이후 진행되었다. 민주화 이후 4·3에 대한 진상규명운동은 기억투쟁을 통해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의의 속에서 사람들의 요구가 집단적으로 모여져 나아갈 정도의 강력한 힘을 추동해내지는 못하였다. 4·3은 30여년간의 침묵과 민주화 이후 진상규명운동의 전개는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광주와 비교해 보았을때, 큰 추동력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였다. 국가를 중심으로 한 관제기억의 투쟁의 승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폭력에 의해 3만여명의 양민이 학살당하였지만, 40여년 동안 사회적으로 철저히 금기시되었고, 제사를 지내는 것조차 불온시하여온 결과이다.

이제까지 4·3의 공식역사는 '공산당 폭동론'이었다. 그와 다른 평가는 2003년에 와서야 이루어진다.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가 확정되면서 이와 다른 새로운 평가가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제주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있어서 그 사건의 성격에 대한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민중항쟁론'과 '양민학살론'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박명림 1988; 제주4·3연구소 1991). 민중항쟁론에 대한 반응으로 우익과 보수진영에서는 '공산당폭동과 과잉집압론'이란 주장을 만들어낸다. 이 입장은 4·3이 북한 또는 남로당의 지시에 의한 '폭동'이지만 진압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민간인 학살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이다(고문승 1991; 박서동 편 1990; 조남수 1988). 이에 따르면 민간인을 학살한 가해자는

‘폭도’이거나 과잉진압한 ‘한민당 정권’이지만, 원인을 제공한 ‘공산당’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권귀숙 2006, 39).

199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민중항쟁론을 주장했던 지식인들이 발발 원인이 나 배경보다 ‘학살의 실상과 피해실태’를 강조하는 ‘양민학살론’을 전개했다(박찬식 1998, 45). 이는 그동안 치우쳐왔던 이념적 논쟁보다 ‘진실찾기’에 더 주력해 보려는 지식인들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그리고 제주도의회에서 ‘4·3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1993), 피해조사보고서가 발간되고(1995), 합동 위령제가 개최되는(1994) 사회적 맥락과 관련이 있다. 사건의 원인 규명보다는 “양측의 무력충돌에서 빚어진 ‘대량학살’이라는 4·3의 정치적 결과에 관심을 집중”한 담론이다(김성례 1999, 253). 양민학살론은 2000년에 공포된 ‘4·3특별법’ 등에 의해 더욱 사회적 지지를 얻고 있다(권귀숙 2006, 39-40). 이처럼 4·3은 40여년 동안 강요된 침묵 속에서, 추동력을 만들어낼 만큼의 기억투쟁의 과정이 없었으며, 민주화 이후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처음 집단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강요된 침묵속에서 새로운 항쟁의 기억과 그 어떠한 추가적인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기억투쟁의 부재 속에서, 현 시점에서 4·3은 국가폭력에 의한 양민학살이라는 것을 국가가 인정하는 수준의 역사적 평가로 귀결된다.

IV. 민주화 운동의 출발점으로 자리잡은 광주 5·18 항쟁

1980년 5월 광주에서 국가테러가 자행된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자 출발점은 5월17일 계엄령의 발효였다.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의 입장에서 계엄령은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대중들을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신군부는 국가의 이름으로 자신들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을 탄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광주지역에 배치된 계엄군은 대학교정에 배치되어 항의하는 학생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러던 중 5월 20일 계엄군이 최초로 시민과 학생들에게 직접 발포하면서 계엄군의 민중학살은 시작되었다.

이에 시민들은 시민군을 조직하여 저항하였지만, 결국 무자비하게 진압되고 말았다. 소수 신군부 세력의 권력장악의 음모에 따른 계획된 만행이자 무고한 양민학살이었다. 1999년 현재 공식 확인된 광주민주항쟁 피해자는 사망자 166명, 부상, 연행 및 구속자 3549명, 행불자 64명이었다.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국가의 첫번째 규정은 소요, 사태, 광주사태 등이었다. 계엄사령관의 담화문에서 확인되듯이 북한의 고정간첩과 김대중의 추종세력들을 지칭하는 ‘불순분자들의 책동으로 유발된 폭도들의 무장난동’이었으며, 호명 은 점차 ‘광주사태’로 고착되어갔다(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편 1997, 29). 이후 전두환 정권은 초기부터 5·18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였고, 지속적으로 ‘공식기억’(official memory)을 강조하였다. 광주민주항쟁에 대한 이러한 평가와 규정은 사건 발생 당시부터 전두환 정권의 집권기 내내 변하지 않는 공식입장이었다. 이를 통해 전두환 정권은 무력진압을 정당화하였다.

이러한 국가의 공식기억에 대항하여 민주화 운동세력들은 사건 발발 당시부터 이러한 ‘폭동론’을 부정하려는 기억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사건이 종료된 초기에는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의 평가를 부인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진상규명이나 구속자 석방 등에 초점을 맞추는 소극적인 대응을 하였다. 1980년 6월 천주교 정의구현 광주대교구 사제단은 <광주사태에 대한 진상>이란 유인물을 통해 비상계엄 해제와 구속자의 석방을 요구하였고, 이어서 다른 천주교 세력들과 구속자 가족, 해외 동포, 기독교인 등이 계속적으로 광주사태의 진상규명과 구속자의 구명 및 석방운동을 펼쳤다(전재호 1999, 245). 그러나 약 1년 후부터는 군의 잔인한 과잉진압에 맞선 시민들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위라는 측면에서 사건의 발단을 찾고,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음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명칭 또한 ‘의거’ 또는 ‘시민항쟁’이라는 명칭으로 대체되어 갔다. 1981년 5월 전남 도민의 이름으로 발표된 시국선언문은 처음으로 ‘광주사태’가 아닌 ‘광주의거’로 규정하였고(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편 1997, 218), 민주주의를 지향한 시민들의 의거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던 대항담론과 차별성을 보여준다(전재호 1999, 245).

1984년 이전에 기억투쟁의 주요 주체들은 직접적 피해자집단, 종교단체 그리고 학생들이었다. 직접적 피해자집단이 개최하는 망월묘역의 추모식 혹은 위령제를 개최하고, 이 행사 이후 도심 진출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충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망월묘역의 추모행사는 주로 유족회가 중심이었고, 학생 및 시민들이 동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종교단체는 성당 혹은 카톨릭센터, 광주 YMCA회관, 교회 등지에서 추모미사나 단식기도 등을 통해 5·18에 대한 진상을 토로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의례를 개최하였다. 반면 학생들의 기억투쟁은 조직화된 형태를 갖추지는 않았지만, 학내 혹은 도심에서 시위를 조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학생들의 시위는 1주기부터 광주와 서울의 주요대학에서 전개되었다.

1984년 이후 기억투쟁은 조직화 및 대규모화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는 망월묘역은 지역 외 명망가나 인사들의 참배 등에 의해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광주 방문 등으로 국가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 예전과 같은 탄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학원자율화에 의해 대학의 학생운동권이 다시 세력화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리고 재야 혹은 야당 정치인들의 참여도 점차 확대되어 갔다(정호기 2002, 135-136). 5·18을 매개로 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80년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사람들의 조직이 자연스럽게 전개되었다. 5·18이 민주화가 필요한 이유로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주요한 매개체로서 작용하였다. 이처럼 한국의 1980년대 민주화운동은 1980년 광주 5·18의 좌절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87년 6월 항쟁의 승리로 그 절정을 이루었다. 6월 항쟁에는 수백만명의 학생, 노동자, 농민, 지식인, 빈민, 여성, 종교인 등이 참여하여 '군부독재타도'라는 공동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대학생들의 기억투쟁은 대학가의 중요한 연례행사가 되었고, 매년 5월에는 광주지역 대학들의 캠퍼스는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치열하게 경찰과의 충돌이 일어났다. 1984년부터는 학생과 민주화 운동세력들이 발표하는 5·18관련 성명서가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면서 대학가의 시위가 크게 확산된다(전재호 1999, 246). 전두환 정권의 권위주의 통치 시기, 1980년부터 1987년 중반까지

매일 평균 1.2건의 시위가 발생하였고, 평균 1.8명이 불법집회와 시위로 구속되었다(동아일보 1988/06/04). 80년대 민주화 운동에 대해 이해영은 “80년대 10년이 남긴 그 수많은 문건, 추정컨대 연인원 수백만이 훨씬 넘게 동원된 시위, 즉히 수천에 달할 이른바 시국사범 등, 같은 시간 지구 위의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놀라운 투쟁열기, 한마디로 80년대는 변혁의 시대였고, 또 신화의 시대”였다고 평가하였다(이해영 1999, 78).

국가는 이러한 기억투쟁에 대해 1984년 이전시기에는 추모행사를 저지하기 위해 경찰을 동원하여 망월묘역일대를 차단하는 것이 기본이고, 유족회 분열전략, 직접적 피해자들의 사건 감금 및 격리, 심지어는 추모행사 이루어지던 시간에 관변단체를 앞세워 다른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1984년 이후에는 망월묘역의 추모식은 용인하되 대학과 도심에서 벌어지는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였다(정호기 2002, 136).

국가의 공식적 기억과 평가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한 것은 1983년 말부터 전개된 민주화운동의 활성화와 학원자율화 바람이었다. ‘광주의거’, ‘광주민중항쟁’, ‘광주학살’, ‘5·18민중봉기’ 등의 명칭들이 공공연하게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광주민중항쟁을 민족, 민주, 민중, 자주, 통일 등의 담론과 연계시키려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학생운동 및 사회운동이 활성화되어 갈수록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민중’적 성격은 더욱 강조되었다. 한국에서 발생한 여러 사건들 중 광주항쟁은 사건 종료 이후 지속적이고 강도높게 진상규명 운동을 전개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민주화운동세력과 학생 및 시민들로부터 분출되는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재평가 노력은 국가체제의 안정에 결정적인 위협요소였고, 그것은 곧 국가로 하여금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재평가를 강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기억투쟁은 군부독재에 반대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기초하게 된다. 광주항쟁은 헌정과 민주주의를 중단하고 군부쿠데타로 집권하는 세력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사건으로서 독재에 반대하는 민주화운동의 근간으로서 기억투쟁 속에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그리고 정치권에서 당시 야당인 신한민주당이 1985년 2월 12일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5·18 기억투쟁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된다. 신한민주당은 5·18 진상규명 요구와 대통령 직선제

를 주장하면서 전두환정권을 압박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 선거에서도 광주전남 지역 유권자들은 김대중 후보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며 정치적 의사를 명확하게 결집하였다.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17.9%가 5·18항쟁에 대한 각성을 그 계기로 삼았다(김귀옥·윤충로 2005, 56).

이처럼 80년대 민주화운동은 광주학살 진상규명과 추모행사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운동이 부흥하고, 사회 전반의 민주화운동세력이 결집할 수 있는 명분으로 작용하였다. 때문에 5·18에 대한 기억투쟁이 곧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으며, 민주화운동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자리 잡게 되었다.

〈표 3〉 김대중과 그정당의 광주전남지역 득표율(%)

	13대 대선 (87.12.16.)	13대 총선 (88.4.26)	14대 총선 (92.3.24.)	14대 대선 (92.12.18.)
광주	94.4	88.6	76.4	95.9
전남	90.0	67.9	61.6	92.1

* 출처: 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가공 집계

한마디로, 5·18은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자 출발점으로 작용하였다. 민주화운동과 함께한 5·18 기억투쟁의 결과, 노태우는 대통령에 당선되자 유족들에게 “광주 치유특별법 제정과 광주사태는 민주화 추진과정의 진통으로 평가해야한다.”는 서신을 발송하였다(1987. 12. 29).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평가가 전환되었음을 보여주었다(1988. 4. 1). 노태우 정권은 광주민중항쟁을 전두환 정권보다 훨씬 긍정적인 표현인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1988년 11월 26일에 노태우 대통령의 특별담화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공식적으로 규정하였다.

〈표 4〉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국가의 공식기억의 변화과정

	전두환 정권	노태우 정권1	노태우 정권2	김영삼 정권
국가의 공식적 평가 및 명칭	광주사태	광주학생과 시민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	광주민주화 운동	5·18광주민주화운동
변화시점		1988. 4. 1. 정부의 광주사태치유대책 발표	1988. 11. 26. 노태우대통령 특별담화	1993. 5. 13. 김영삼 대통령 특별담화

이러한 광주 5·18에 대한 기억투쟁의 결과 87년 민주화와 더불어 광주에 대한 재평가를 바로 시작할 수 있었고, 90년대에 들어서도 그 동력이 상실되지 않았던 결과, 전직 대통령 두 명을 포함한 그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과 특별법의 제정까지 이를 수 있었다. 5·18에 대한 기억투쟁이 새로운 역사적 함의를 만들어 내고, 그 과정이 바로 민주화 과정이라는 등식을 만들어냄으로써 1980년 광주에 대한 기억투쟁은 성공적인 새로운 기억의 매개체로서 역사적 전환점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

V. 결론

무엇이 우리의 과거인가? 과거가 우리의 집단적 정체성을 정의하는가?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는 동일한 것인가? 어떻게 기억을 공유하는가? 공유된 기억은 역사와 같은 것인가? 기억은 과거와 사회적 관행의 표현을 전달하는 반면, 역사는 과거에 대한 지식이다. 우리가 기억하는 과거와 공식역사가 전하는 과거는 항상 같지 않다.

지금까지 기억투쟁이라는 개념을 통해 제주와 광주의 항쟁이 가지는 역사적 평가와 현재적 의미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과거 국가가 국민을 억압하기 위해 자행한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역사적 의미는 결국 폭력이 자행된 이후 억압의 피해자인 국민들이 국가가 만들어낸 공식기억을 얼마나 깨뜨릴

수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국가는 제주를 일방적으로 반국가적 ‘공산폭동’의 대표적인 사례로 규정지어 버렸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의 권위가 뒷받침하는 확고한 공식규정으로 1980년대까지 거의 40년 동안 반공주의 지배담론의 중요자원을 이루어왔다. 4·3에 대한 제주도민의 기억은 가능한 되살리고 싶지 않고 떨쳐버리고픈 기억이 되었다. 어떠한 정기적인 추모식도 치루지 못했었고, 관련 요구를 담은 집회와 시위는 생각지도 못하였다. 4·3에 대한 공식기록과 다른 평가는 2003년에 와서야 이루어진다. 2003년 10월 15일 제주4·3사건 진상보고서가 확정되면서 이와 다른 새로운 평가가 처음 나타나게 되었다. 사건 이후 전개되는 기억투쟁의 부재 속에서, 4·3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는 확대될 수 없었고, 새로운 평가도 최근에 와서야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광주 5·18에 대한 국가의 첫번째 규정 또한 광주사태였다. 전두환 정권은 초기부터 5·18을 북한의 사주를 받은 불순분자들에 의한 폭동으로 규정하였고, 지속적으로 ‘공식기억’(official memory)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다음해부터 이러한 ‘폭동론’을 부정하려는 기억투쟁을 끊임없이 전개하였다. 망월묘역은 민주화운동의 성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5·18에 대한 기억투쟁이 곧 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기 때문에 5·18의 역사적 의미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으로 확대되었고, 그 결과 좀 더 빠르게 새로운 역사적 평가가 가능해지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항쟁 자체가 가지는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였다. 그 본질적 성격이 가지는 영향력 또한 이후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항쟁이후의 전개과정을 기억투쟁의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역사적 기억으로서의 의미의 재생산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건 이후 기억투쟁을 통해 관제 공식기억을 떨어낼 수 있는 힘을 얼마나 추동해내느냐에 따라 사건 자체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새롭게 부여되는 역사적 함의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달린 것이다. 이러한 기억투쟁 그리고 기억의 재생산의 과정이 어떠한가에 따라 모든 역사적 사건들의 평가가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동일한 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가인 독일과 일본이 전범국가로서 자신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의 재생산을 서로 다르게 하여왔기 때문에 주변 피해 국가들에

대한 태도와 역사적 평가에 대한 태도가 다르게 나타는 것이다.

이러한 기억의 정치 또는 기억투쟁의 개념을 통해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 대한 새로운 평가를 시도할 때 사건이후 그 사건에 대한, 그 사건에 따른 역사적 전개과정을 맥락적으로 함께 검토해봄으로써 그 사건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들을 만들어낸 많은 사건들에 대한 맥락적인 평가와 새로운 의미찾기의 과정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기억투쟁의 개념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K C I

■ 참고문헌

- 고문승. 1991. 『제주 사람들의 설움』. 서울: 신아문화사.
- 권귀숙. 2006. 『기억의 정치: 대량학살의 사회적 기억과 역사적 진실』. 서울: 문학과지성사.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편. 1997. 『5·18 광주민주화운동 자료총서』 제2권. 광주: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2001. 『5·18민중항쟁사』. 서울: 도서출판 고려.
- 김귀옥·윤충로. 2005. 『1980년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경험과 기억』.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성례. 1999. “근대성과 폭력: 제주 4·3의 담론정치.”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 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 4·3연구』. 역사비평사. pp. 242-267.
- 김영범. 1999. “집단학살과 집합기억- 그 역사화를 위하여.” 『냉전시대 동아시아 양민학살의 역사』. 제주: 제주4·3연구소 창립 1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발표문집. pp.21-36.
- 김영수. 2008. 『과거사 청산, ‘민주화’를 넘어 ‘사회화’로』. 서울: 도서출판 메이데이.
- 김종민. 1999. “4·3이후 50년.” 역사문제연구소·역사학연구소·제주4·3연구소·한국역사연구회 편. 『제주4·3연구』. 서울: 역사비평사. pp.338-424.
- 나간채 외. 2004. 『기억투쟁과 문화운동의 전개』. 서울: 역사비평사.
- 박명립. 1988. “제주도 4·3 민중항쟁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서동 편. 1990. 『영원한 우리들의 아픔 4·3』. 제주: 태화인쇄소.
- 박서동 편. 1990. 『월간관광제주』 4월호.
- 박찬식. 1998. “제주학 연구의 성과와 과제.” 『제주도 연구』 제15집. pp. 41-54.
- 이완범. 2005. “박정희정부의 교체와 미국, 1979-1980.” 한국학중앙연구원 편. 『1980년대와 한국사회연구』. 서울: 백산서당.
- 이해영. 1999. “ ‘사상사’로서의 1980년대: 우리에게 1980년대는 무엇인가?” 이해영 편. 『1980년대 혁명의 시대』. 서울: 새로운 세상.

- 전재호. 1999. "5·18담론의 변화와 정치변동." 학술단체협의회. 『5·18은 끝났는가』. 서울: 도서출판 푸른숲.
- 정호기. 2002. "기억의 정치와 공간적 재현." 전남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 제민일보4·3취재반. 1994. 『4·3은 말한다』1, 2. 서울: 전예원.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제주: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 제주4·3연구소. 1991. 『제주항쟁』. 서울: 실천문학사.
- 조남수. 1988. 『4·3진상』. 제주: 월간관광제주.
- Benson, S. P. and Brier, S. and R. Rosenzeig. 1986. *Presenting the Past: Essays on History and the Public*.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 Halbwachs, M. 1950(1992). *On Collective Memor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obsbawm, E. and Ranger, T. 1984.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lick, J. K. 2003. *States of Memory: Continuities, Conflicts, and Transformations in National Retrospection*. Duke: Duke University Press.
- Olick, J. K. and Robbins, J. 1998. "Social Memory Studies: From Collective Memory to the Historical Sociology of Mnemonic Practic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4. pp.105-140.
- Schudson, M. 1992. *Watergate in American Memory: How We Remember, Forget, and Reconstruct the Past*. New York: Basic Books.
- Williams, R. 1973. "Base and Superstructure in Marxist Cultural Theory." *New Left Review*. Vol. 82. pp. 3-16.

- 투 고 일 : 2011년 03월 09일
- 심 사 마 감 일 : 2011년 04월 14일
- 수 정 일 : 2011년 04월 23일
- 최종게재확정일 : 2011년 04월 29일

Abstract

The Struggle of Memory About the State Violence: Comparing on Massacres of Gwangju and Jeju in South Korea

Sung Woo Lee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analyze what is different origin of historical implications on Massacres of Gwangju and Jeju in South Korea. This article argues the different implications because different Struggles of Memory about Jeju in 1948 and Gwangju in 1980. The Memory of the incident by the state terror have always important many political significances. Then, what is the main determinants of difference between peoples's memory and historical implications of Massacres of Gwangju and Jeju? The cause is that Jeju didn't have the strong intensity of the struggle of the memory. Jeju in 1948 be buried in oblivion for long time by the state, by peoples, by intent. However, Gwangju in 1980 made the struggle of memory against the state terror and new political implications. In short, the case of massacres of Gwangju and Jeju in South Korea show that the most need to historically upright revaluation against the state terror is the strong struggle of memory by peoples.

Key words: State Terror, Struggle of Memory, Politics of Memory, 5-18, 4-3